

【토론 2】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익향상 토론문

박 선 민(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보좌관)

1.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통과 이후 올해 12월 홍콩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를 비롯하여 DDA 협상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농업을 둘러싼 정세는 마치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다. 농업이 처한 객관적 상황이 이렇진대 여성농업인 또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농업인은 지금까지 '세상의 어머니, 땅의 어머니'라고 불려왔다.

이 땅에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5000년의 역사 내내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자식을 먹여 살렸으며 왜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고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불러 나라를 지켜왔다.

우리 땅 밭고랑 고랑, 논 한 뼨기 마다, 과수나무 한 그루 까지 어느 하나 여성농업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그 가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면면히 서려있다.

농업이 위기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를 지혜롭게 개척해 나갈 힘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체 농가인구 중 51.6%가 여성으로 노령화 추세 속에 평균수명이 보다 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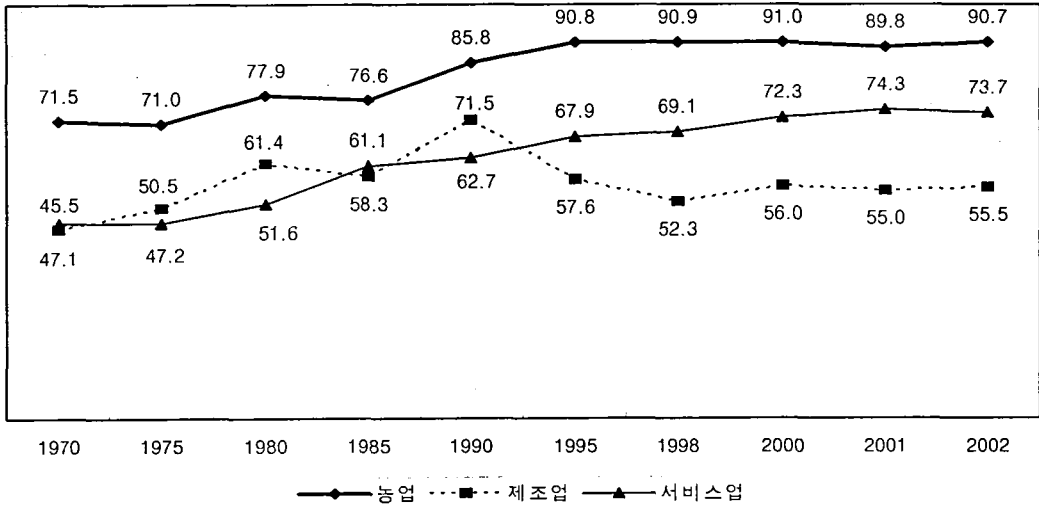
산업별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를 볼 때 제조업은 1990년 71.5%에서 2002년 55.5%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농업은 85.8%에서 90.7%로 증가하였다.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 천명)

| 연도 | 농가인구 | | | 19세이하 | (1)20세이상~65세미만 (비율) | 65세이상 |
|------|-------|-------|-------|-------|------------------------|-------|
| | 합계 | 남 | 여 | | | |
| 2001 | 3,933 | 1,903 | 2,031 | 686 | 2,288(58.2%) | 959 |
| 2002 | 3,591 | 1,748 | 1,843 | 577 | 2,074(57.7%) | 940 |
| 2003 | 3,530 | 1,715 | 1,815 | 554 | 1,994(56.5%) | 982 |
| 2004 | 3,415 | 1,654 | 1,761 | 512 | 1,902(55.7%) | 1,002 |

* 2004 통계청

□□ 산업별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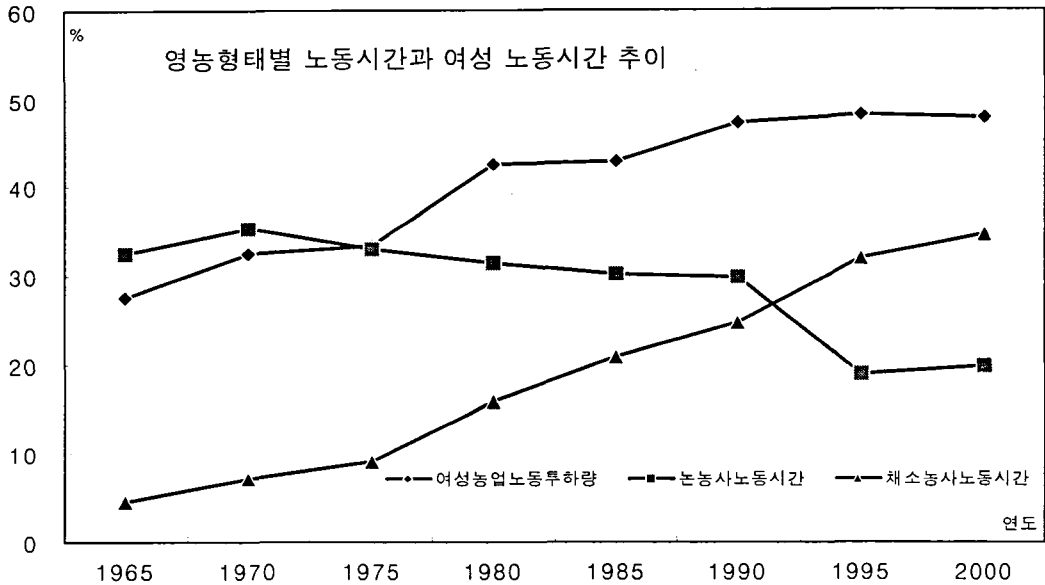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03 김영옥에서 재인용)

농가의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1990년 논벼가 69.7%이던 것이 2002년에는 55.1%로 줄어들었고, 대신 채소는 9.7%에서 18.8%로, 과수도 6.1%에서 10.7%로 증가하였다.(2003 농림부) 논 중심 영농에서 채소, 과수 등의 원예작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 증가와 직결된다.

채소 등 발작물과 시설 하우스는 기계화 되어 있는 논농사와 달리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 영농형태별 노동시간과 여성노동시간 추이



*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2004 연구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자기인식은 ‘남편과 협력해서 농사짓는 여성’이 78.7%로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발제자도 언급했다시피 ‘농업이 여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즉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농업의 변화 추세와 함께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의식 변화도 작용하고 있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

| 구 분 | 구성비(%) |
|---------------------------------|--------|
|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여성농업인 (준경영인) | 6.7 |
| 남편이 주인인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 2.7 |
| 남편과 협력해서 농사짓는 여성 (협업배우자, 공동경영주) | 78.7 |
| 농사를 본인이 주도하는 전문농업인 (독립경영주) | 0.6 |
| 남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돕는 보조자 (농업보조자) | 11.3 |
| 전 체 | 100.0 |

*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제도적 지원방안 (2004 김경미 등)

2.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법제와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적 지위 확보의 문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자, 농가경영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조자의 지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정주부’ 또는 ‘무직자’로 취급되고 있다.

농기계 구입, 농지 거래, 농사작목 결정 등 농업경영과 관련된 많은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져 있으며 금융거래, 출하 등도 남편의 명의로 하다 보니 조합원 가입은커녕 자신의 통장 하나 갖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제 여성농업인 정책은 전체 농업노동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류의 문제로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 없이는 농업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관점으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 법 제도상의 개선점

1998년 농림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다.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어 2001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2001~2005)」을 수립하였고,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2차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이 통과되어 이 또한 올해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부처별 통합을 통해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것, 농가소득 보장에 대해 다각도로 고려했다는 것,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도 보태어지고 있다.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농어촌여성건강관리 강화가 5년간 단2회에 걸친 ‘중장년 여성 건강실태조사’와 2008년부터 이루어지는 ‘건강프로그램 보급’에 그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특히 발제자의 의견대로 두 가지의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에서

도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농작업 상·재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차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방안

1) 중앙정부의 역할

○ 여성부와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제 세부 내용

| 구분 | 여성농업인관련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 여성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권익신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정화된 역할분담의식의 개선 2. 농어촌 생활개선 및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3.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4. 협동조합에 여성의 정회원 가입촉진 5.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관련 여성농업인 대표 참여 확대 6.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지원 7. 여성농업인 영농 및 농기계교육 훈련 8.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교육 프로그램 지원 9. 농촌관련 여성단체 육성 지원 |
| 여성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 인력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 기반 조성 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 강화 4.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농림부 제1차 여성 농업인 육성 계획(2001~2005) | 기본전략 | 핵심과제 |
| |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훈련 2.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3.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 4.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5.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
| | 2)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 7.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8. 여성단체 위탁 사업 활성화 9.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지원 10.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의식 고양 11.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
| |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3.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
| | 4) 여성농업인 정 책시스템구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연구 15.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

* 여성부(1998,2003), 농림부 (2001) / 박재규 여성개발연구원 재인용

□□ 농림부 여성농업인 사업 2004년 추진실적 및 2005년 계획 총

| | 2004년 | | 2005년 계획 |
|---------------------------|--------------------|-------------------|-------------------|
| | 계획 | 실적 | |
|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훈련 | | | |
| ○ 정보화교육 | 30,300명 | 31,893명 | 22,140명 |
| ○ 영농기술교육 | 50,600명 | 63,531명 | 50,750명 |
| ○ 전문농업경영교육 | 340명 | 312명 | 340명 |
| □ 여성농업인 교육시스템 구축 | | | |
| ○ 여성농업인 교육방안 연구 | - | - | - |
| ○ 여성농업인 교관반 운영 | 23명 | 19명 | 30명 |
| ○ 여성농정위원, 농촌체험가이드반 운영 | - | - | 80명 |
| □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 | 미정 | 10명 (자자체 324명) | 28명 |
| □ 창업농후계여성농업인육성 | 20%이내 | 147명(13.1%) | 창업농여성우대 |
| □ 발동사 농작업 기계화 추진 | | | |
| ○ 발동사용 농기계 현장점검시험 | 3종 | 5종 | 5종 |
| ○ 발동사용 농기계 개발 | 2종 | 3종 | 2종 |
| ○ 농산물 산지처리, 자동화·로봇화 기계 | - | - | 4종 |
| □ 각종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 36% | 32.4% | 36% |
|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 | | |
| ① ○ 여성조합원(전체201만명/47.5만명) | 30% | 23.6% | 30% |
| ○ 여성대의원(전대의원 7.2만명) | 5,000명 | 4,886명(6.8%) | 5,500명 |
| ○ 여성임원(전임원 13,000명) | 300명 | 237명(1.8%) | 350명 |
|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 | |
| ○ 도·농 교류사업 | 미정 | 285백만원 | 299백만원 |
| ○ 도시여성 대상 소비자 농업교육 | - | - | 7,300명 |
| □ 여성농업인 단체활동 지원 | | | |
| ○ 농림부 | 76백만원 | 76백만원 | 81백만원 |
| ○ 농협중앙회(농가주부모임) | 50백만원 | 66백만원 | 50백만원 |
| □ 여성농업인 전문직업의식 고양 | | | |
| ○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 미정 | 71백만원 | 미정 |
| ○ 여성농업인 표창 | 20명 | 25명 | 20명 |
|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27개소 | 27개소 | 34개소 |
| □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87,100명 (1.5ha) | 75,000명 | 92,000명 (전 농가) |
| □ 농가도우미제도 정착 | 3,200명 | 3,370명 | 3,400명 |
|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49,200명 (1.5ha) | 21,000명 | 31,100명 (2ha) |
| □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 - | 3,187명 | 8,400명 |
| □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연구 | | | |
| ○ 농림부 | 1과제 | 2과제 | 1과제 |
| ○ 농진청 | 3과제 | 3과제 | 4과제 |
|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제도 시행 | - | - | 1개분야 정책 |
| □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 | | |
|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16개 시·도 | 12개 시·도 | 16개 시·도 |
| ○ 여성정책반 운영 | 1회(50명) | 1회(33명) | 1회(50명) |
| ○ 제2차 5개년계획 수립 | - | - | 12월 확정 |

※ 「미정」: 사업은 계획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시기나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확보

과거보다는 많이 확대되었으나 신기술 보급 및 교육이 남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접근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여성농업인이 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 기회를 확대해야만 하며 여성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이 보다 전문화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가. 노령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를 고려할 때 노령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농업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많은 여성농업인 정책이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농업인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관될 경우 노령여성농업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하였고, 현재도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적어도 20여년간은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사각지대가 양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가입자 현황을 보면 전체 농가 인구수에서는 여성이 51.4%(2003년 기준)를 나타내는 반면 가입자 수에서는 9.9%에 불과하다.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농업인들은 남편 사망 후 노후의 생활보장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어업인 가입자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연도 | 전체가입자 | 남 | 여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이상 |
|--------|-------|------------|-----------|---------|-----|-----|-------|
| 2002 | 459 | 405(88.2%) | 54(11.8%) | 2 | 55 | 168 | 234 |
| 2003 | 402 | 358(89.1%) | 44(10.9%) | 1(637명) | 41 | 148 | 213 |
| 2004 | 357 | 320(89.9%) | 36(10.1%) | 0(285명) | 29 | 129 | 198 |
| 2005.7 | 344 | 309(90.1%) | 34(9.9%) | 0(249명) | 25 | 121 | 198 |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2005 국정감사, 현애자의원실 재구성)

나.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확보

여성농업인은 장기간 과중한 노동 및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는 모성보호 및 노령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들은 궤양, 백/녹내장 등 31.8%, 목과 허리 디스크 26.4%를 비롯하여 한가지 이상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57.4%에 달한다.

그러면서도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에 심하지 않아 그냥 참거나(24.6%) 잠시 쉬어주는 경우(21.6)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의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의 현실에서 시급하게는 여성농업인들이 접근 가능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소,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동진료소, 가정방문진료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만성 질환 및 농부중, 농약중독, 농작업 재해 등에 대해 전문적 조사, 연구 및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 건강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경우 대응방식

| 대응방식 유형 | 비율 |
|-------------------|-------|
| 심하지 않아 그냥 참는다 | 24.6 |
| 잠시 쉬어주는 것이 전부이다 | 21.6 |
|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복용한다 | 8.6 |
|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다 | 37.7 |
| 보건소를 방문한다 | 5.8 |
| 기타 | 1.7 |
| 합계 | 100.0 |

* 전북 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년)

□□ 여성농민의 건강상태 분석

| 질병유형 | 비율 |
|-------------------|------|
| 암(유방암, 자궁암 등) | 3.4 |
| 당뇨 및 고혈압 | 15.1 |
| 골다공증 | 15.2 |
| 디스크(목과 허리) | 26.4 |
| 기타(궤양, 백/녹내장 등) | 31.8 |
| 합계(최소 한가지 이상의 질병) | 57.4 |

* 전북 여성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년)

다. 교육 및 보육정책

지난 6월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삶의 질 5개년 계획 진단토론회’의 마지막회인 교육 분야에서 참석자들은 “곡식농사는 적자를 보아도 자식농사만 잘 지으면 원이 없겠으나, 자식농사가 안되어 다들 농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극한의 위기상황까지 와있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농어촌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학교 ‘통폐합’으로 1982년~2005년 7월 현재 폐교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3,032개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628개교), 경북(527개교), 경남(478개교), 강원(371개교), 충남(205개교), 충북(203개교) 순이다.

실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매년 통폐합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학부모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모두 이 학교가 언젠가는 폐교될 것이라는 불안을 키운다. 이는 결국 이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는 방과 후 교육의 문제였다.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학교 선생님들마저 3-4시쯤 중심지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나면, 방치된 아이들은 교육의 공황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몇 년동안 누적되면, 도시아이들과 학력격차가 안날 수가 없을뿐더러 특기적성 교육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미취학 아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28,040개소 중 4,103개소(14.7%)로, 이중 국공립시설은 1,352개소(4.8%)에 불과하며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46개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3.5%인 반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증가율은 각각 50.5%, 64.4%나 된다.

여성가족부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08년까지 연간 40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여, 국공립 비율을 10%까지 제고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국·공립 보육시설 400개소 신축예산(국비 383억원)이 확보하였으나 2005년 9월 16일 현재 그에 절반도 안 되는 172개(43%)만이 신축 또는 추진 계획에 있는 상황이다.

이 계획에는 ‘농어촌 등 보육시설 미설치지역(539개소)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00개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월 현재 49개소에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 | 최고경영자 과정교육 | 해 외 농업연수 | 여성위원 위촉비율 (농정심의회) | 단체활동 지 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 |
|----|---------------|-------------|-------------------------|-------------|------------|-------|
| | | | | | '04실적 | '05계획 |
| | 명 | 명 | % | 백만원 | 개소 | 개소 |
| 서울 | | | | | | |
| 부산 | | 12 | | | | |
| 울산 | | | 33.0 | | | |
| 경기 | | 40 | 30.0 | 46 | 4(1) | 4 |
| 강원 | | 10 | | 28 | 3 | 3 |
| 충북 | 15 | 108 | 30.0 | 30 | 3 | 3 |
| 충남 | 32 | 20 | | 20 | 3 | 3 |
| 전북 | | 26 | | 25 | 4 | 6 |
| 전남 | 30 | 47 | 21.0 | 40 | 3 | 3 |
| 경북 | 24 | 20 | | 60 | 2 | 2 |
| 경남 | | 20 | 31.0 | 31 | 3 | 5 |
| 제주 | 18 | | 21.0 | | 5(2) | 5 |
| 합계 | 119 | 324 | 27.7 | 280 | 30(3) | 34 |

* 농림부, 농진청, 농협과 중복 추진실적은 제외

* 여성농업인센터의 ()는 자체지원 실적 내서이며, 경북은 농촌보육·정보센터 12개소별도 운영 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실적 비교

| 지역 | 년도 | 삶의 질 제고 | | 정책시스템 구축 | |
|-----|------|--|--|------------------------------|----------------------|
| | | 1)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 2) 농가도우미제도 | 1) 정책과제 | 2) 정책추진체계 |
| 강원도 | 2002 | - | 240명, 194백만 | - | 농업정책과, 소득지원계 |
| | 2003 | - | 280명, 228백만원 | - | |
| 경기도 | 2002 | 4,867명, 3,703백만 | 221명, 139백만 | - | 농집정책과, 농정담당계 |
| | 2003 | 8,962명, 7,435백만 | 290명, 188백만 | - | |
| 충북 | 2002 | 농업인자녀:3,605명, 755백만 모자농업인자녀:86명, 57백만 | 169명, 92백만 | - | 농업정책과, 소득지원계 |
| | 2003 | 농업인자녀:5,061명, 4,206백만 | 227명, 132백만원 | - | |
| 충남 | 2002 | 5,552명, 3,273백만 | 240명, 156백만 | - | 농정유통과, 농정정보인 력담당계 |
| | 2003 | 9,791명, 7,075백만 | 353명, 148백만 | - | |
| 전북 | 2002 | 3,730, 2,801백만 | 296명, 235백만 | -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 당계 |
| | 2003 | 6,210명, 5,361백만 | 285명, 145백만 | 한농연 발표(40명) 여성농업인육성계 획 | |
| 전남 | 2002 | 6,336명, 3,554백만 | 456명, 370백만 | - | 농산유통과, 인력육성담 당계 |
| | 2003 | 11,637명, 7,838백만 | 511명, 414백만 | - | |
| 경북 | 2002 | 4,711명, 3,080백만 | 355명, 169백만 각종 지원활동(건강관리실, 주거환경개선, 마을조성 등) | 3개과제 개발 : 경북여성정책개발 원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담 당계 |
| | 2003 | 10,685명, 8,054백만 | 493명, 412백만 | 2개과제 개발 :경 북여성정책개발원 | |
| 경남 | 2002 | - | 268명, 256백만원 | - |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 당계 |
| | 2003 | - | 389명, 315백만 | - | |
| 제주도 | 2002 | - | - | - | - |
| | 2003 | 2,665명, 1,774백만 | 265명, 171백만 | - | |
| 광주 | 2002 | 인문교과 2명, 2백만 | - | - | - |
| | 2003 | 5명, 1백만 | 6명, 4백만(광역시 첫 실시) | - | |
| 울산 | 2002 | - | 울주군, 4명, 3백만 | - | - |
| | 2003 | - | 울주군, 4명, 3백만 | - | |
| 대전 | 2002 | - | - | - | - |
| | 2003 | - | 3명, 2백만 | - | |
| 대구 | 2002 | - | - | - | - |
| | 2003 | - | - | - | |

*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2004 연구보고서, 여성개발원)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핵심정책과제 가운데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과 여성농작업 기계화 추진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 힘든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도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중앙 정부 사업을 집행하는데 급급한 실정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욱이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화시대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조건에서 오히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퇴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관계 속에 분권화 초기 지역의 역할을 강제해 내지 않으면 그나마 진일보 하였던 여성농업인정책이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정책의 방향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여성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 권리적 측면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며, 당면한 과제를 여성농업인의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 스스로의 자각이다. 발제자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들과 농업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식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일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실상 여성농업인의 단체 활동은 도시민에 비해 처지지 않는다.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여성경영인연합회, 여성농민회 등 가시적인 사회활동과 함께 부녀회, 종교활동 등을 통하여 마을 단위 생활 속에서도 공동체성이 몸에 베어있다. 요즘은 이장 등의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활동이 자기만족적이거나 일상생활의 연장이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도록 영역을 확장하고 '사회적 목소리'화 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끼리의 벽을 넘어서 남성들과 동등한 영역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동조합원 가입, 조합 이감사 활동, 각종 위원회 활동, 시민사회활동, 정당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정책은 농업정책과 분리되어질 수 없다.

농업정책이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서 여성농업인정책만이 독자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농업이 몰락하면 여성농업인들에게도 미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들만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 모두와 농민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농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많은 이들이 생태환경과 식량, 생명과 평화를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여성농업인들이야말로 인류 미래의 가치를 생산하고 지키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